

“2009년 1월 20일,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그 날을 잊지 않았다”

# 용산참사 6주기

## 여기, 사람이 있다

2015년 1월

16일(금) 추모문화제

19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20일(화) 묘역참배/추모제

12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10반 대한문 버스 출발)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 용산참사 6주기 추모문화제

2015년 1월 16일(금), 오후 7시

조계사 역사문화박물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사회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민중의례

추모사 백기완 선생

추모시 낭독 송경동 시인

추모공연 노래로 물들다

추모사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추모사 세월호 유가족

추모영상 김일란 이혁상 연분홍치마

진상규명과제발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유가족인사 유가족

추모공연 평화의나무합창단

6주기 우리의 다짐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묘역 참배 / 열사 추모제

2015년 1월 20일(화), 12시 (10시30분 대한문 앞 버스 출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 추모주간 일정

- \* 13(화) 오전11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용산참사현장
- \* 15(목). 오후 7시, 용산6주기 추모기도회 / 용산참사현장
- \* 17(토), 오전11시, 김석기 퇴진.처벌 기자회견 및 선전전 / 한국공항공사(김포공항)
- \* 20(화),~25일(일) 추모전시회 / 서울시시민청갤러리 (오픈식 : 20일,화, 오후4시)
- \* 22(목), 오후2시, 추모토론회(임차상인보호 토론회 )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 28(수), 오후7시, 추모미사 / 명통가톨릭회관 2층 강당

## 열사의 삶과 죽음



### 이상립 열사 (당시 72세)

1938.12.20 충남당진 출생

2008. 3 용산4지구 상공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철거반대투쟁 전개.

2009. 1.19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농성 돌입.

2009. 1.20 새벽,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사망.

2010. 1. 9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이상립 열사는 1986년부터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한강갈비'집을 운영, 1993년 그 자리에 막내 아들 내외와 함께 '레아호프'로 변경하여, 20여 년간 한 곳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오셨다. 가게 위 옥탑에서 생활하면서도, 아들내외와 일구는 가게에 온갖 정성을 쏟아가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오셨다. 그런 그의 평범한 소시민으로서의 삶은 2007년 경 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레아호프가 있는 한강로2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서,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한 협박과 폭행, 영업방해로 세입자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기 시작하자, 열사는 잘못된 개발의 현실을 깨닫고 분노하셨다. 이에 이상립 열사는 철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 3월 용산4지구 상공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건설, 초대 위원장을 맡으며,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셨다.

2009년 1월 19일, 이상립 열사는 구청의 외면과 조합과 용역의 폭력에 내몰리던 세입자들과 레아호프 옆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짓고, "여기, 사람이 있다", "대책 없는 살인개발 중단하라", "철거민 주거,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으나,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투입, 무자비한 살인진압과정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사망하셨다.



### 양희성 열사 (당시 58세)

1952. 2.18 전남순천 출생

2008. 3 용산4지구 상공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2009. 1.19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농성 돌입.

2009. 1.20 새벽,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사망.

2010. 1.9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본인이 직접 요리하며 일식당을 운영하던 양희성 열사는 두 아들과 함께 일식당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셨다. IMF로 인해 몇 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가족들과의 약속, 아들들과 이루고 싶었던 꿈을 생각하며 꿋꿋이 살아오셨다. 2004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빛을 내 용산

국제빌딩 옆에 상호복집을 차렸다. 새 출발의 기쁨도 잠시, 용산에 가게를 연지 이년 만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5,6년은 더 걸릴 것 같던 개발이 벼락치기처럼 진행되면서,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한 행패가 시작되었다. 대책 없이 쫓겨나야 하는 상황에 맞서, 2008년 3월 ‘용산 4지구 상공철거민 대책위원회’를 건설하여,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철대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서, 잘못된 개발악법을 바꾸겠다는 열의를 다하였다.

2009년 1월 19일, 양희성 열사는 구청의 외면과 조합과 용역의 폭력에 내몰리던 세입자들과 함께 용산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짓고, “여기, 사람이 있다”, “대책 없는 살인개발 중단하라”, “철거민 주거, 생존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농성에 돌입하였으나,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투입, 무자비한 살인진압과정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한대성 열사 (당시 54세)

- 1956. 6.14 강원화천 출생
- 2008. 6 수원신동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 2009. 1.19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농성 돌입.
- 2009. 1.20 새벽,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사망.
- 2010. 1. 9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고 가정을 꾸린 한대성 열사는, 가난이 대물림될까 두려워 강원도에서 나와 수원에 일자리를 얻었다. 수원 변두리 논밭 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 신동으로 이사와 2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야 월세 단칸방을 벗어나 이웃에 있던 아담한 독채로 옮겨 살며, 가진 것 없지만 행복한 가정을 일구며 살아왔다.

평소에 말이 없고 조용하던 열사의 삶은 2007년부터 수원시에서 시작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절망하게 되었다. 논밭을 사이에 있는 보증금 500만원 내외인 작은 농가주택 동네라, 보상비 몇 푼으로는 도저히 갈 곳을 찾을 수 없었다. 2008년 6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철거민대책위원회를 세우고, 주거권을 쟁취하기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연대집회를 다니며, 자신 보다 힘든 이들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다.

2009년 1월 19일, 열사는 자신과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인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에 연대하고자 함께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이들의 외침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하였고, 무자비한 살인진압과정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이성수 열사 (당시 51세)

- 1959. 9. 1 경기도 용인 출생
- 2008. 2. 용인신봉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 2009. 1.19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농성 돌입.
- 2009. 1.20 새벽,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사망.
- 2010. 1. 9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던 이성수 열사는 2007년, 용인 수지에서 13년을 살아오던 집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철거당했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자녀가 돌아오니 집이 없어져 버렸다. ‘즉석 생과자’를 파는 노점으로 가정을 일궈오던 열사는, 노점단속과 탄압에 시달려오던 삶도 원망스러운데, 가족의 삶터인 집마저 빼앗긴 것에 분노하였다.

부서진 집에서라도 쫓겨날 수 없다며, 천막을 짓고 살면서 주거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였다. 2009년 1월 19일, 열사는 자신과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인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에 연대하고자 함께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이들의 외침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하였고, 무자비한 살인진압과정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윤용현 열사 (당시 49세)

- 1961. 9.22 충남천안 출생
- 2005. 서울 중구순화 철거민 대책 위원회 건설
- 2009. 1.19 철거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용산 남일당 건물 망루농성 돌입.
- 2009. 1.20 새벽, 경찰특공대의 무자비한 살인진압으로 사망.
- 2010. 1. 9 355일 만에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

‘미락정’. 윤용현 열사가 10년 가까이 중구 순화동에서 장사하던 한정식 식당이자,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다. 유들유들한 성격의 열사는, 온갖 정성을 쏟으며 열심히 일해 왔다. 2005년 순화동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영업을 하는 상가들이 있음에도, 동네는 철거용역 깡패들에 의해 폐허가 되었다. 2006년 겨울, 결국 철거용역깡패들과 집행관이 미락정에 들이닥쳐 물건을 빼앗아 갔고, 그 뒤 다시 가게를 열지 못했다. 결국 열사는 하루아침에 빼앗겨 버린 주거권과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 했다.

2009년 1월 19일, 닳새 후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가족들에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열사는 자신과 다르지 않은 처지에 놓인 용산 철거민들의 망루 투쟁에 연대하고자 함께 남일당 옥상 ‘망루’에 올랐다. 그러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이들의 외침은, 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하였고, 무자비한 살인진압과정에서 대형 화재참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끝나지 않은 용산 투쟁의 기록

2009. 1.19 : 용산4지구 철거민 세입자 20여명 강제철거 중단과 주거생존권을 요구, 한강로 변 남일당 건물 4층에서 망루 농성 돌입, 경찰 1600여명 배치, 강제진압 시도
2009. 1.20 : 새벽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망루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사망. 당일 저녁 용산에 수만의 시민이 모여 추모대회와 행진 진행.
2009. 1.21 : 100여개 노동종교시민사회단체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2009. 2. 9 : 검찰, 철거민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짜맞추기 수사결과 발표.
2009. 7.20 : 참사 6개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기 위한 천구의식을 진행. 경찰 원천봉쇄.
- 2009.10.28 : 용산 1심 재판 선고, 망루 생존 철거민에 전원 유죄 판결 5~6년 형 선고.
- 2009.12.30 : 정운찬 총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개발 정책의 개선을 담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발표. 용산범대위는 장례 협상 타결 수용.
2010. 1. 9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엄수(서울역광장), 노제(용산), 마석모란공원 안치
2010. 1.25 : 1주기 추모제(20일)를 끝내고, 유가족, 철거민, 범대위 참사현장 철수.
2010. 3.29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발족
2010. 5.31: 용산 항소심, 망루 생존 철거민에 유죄 판결 4~5년 선고.
2010. 6.24 :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결정
2010. 9.28 : 구속철거민들,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0.10.20 : 고법, 용산4구역 관리처분 무효 판결
- 2010.11.11 : 대법, 망루 생존 철거민 7명에 원심(4~5년) 확정판결.
2011. 1.20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제
2011. 6.16 : 용산철거민, 쌍차노동자 DNA 불법 채취, 헌법소원
2012. 1.18 : 용산참사 3주기 추모 콘서트, 박원순 시장 참석. 시정 책임자로서 유가족에게 사과.
2012. 1.18 : 용산참사 재발방지를위한 ‘강제퇴거금지법’ 발의.
2012. 1.19~20 : 용산참사3주기 추모대회 및 추모제
2012. 4. 7~10 : 용산참사 유가족, 김석기 경주총선 출마 선거사무소 앞 천막농성 돌입
2012. 6.21 : 용산다큐 <두 개의 문> 극장 개봉. 7만관객 동원 흥행.
2012. 6.28 : 쌍차(S)-강정(K)-용산(Y)의 연대. SKY공동행동 출범 시국회의
- 2012.10. 5~11.4 : SKY 공동행동, ‘생명평화대행진’ 전국 행진
- 2012.10.26 : 구속자 8명 중 2명, 3년 9개월만에 가석방 출소.
- 2012.11. 5~12.31 : 용산-쌍차-강정-탈핵,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 선포. 농성 돌입
2013. 1.20 : 용산참사 4주기
2013. 1.31 : 용산참사 망루농성 철거민 유가족 이충연 등 5명 특별사면
- 2013.10. 7 : 용산 진압책임자 김석기,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 유가족 출근저지 농성 돌입
2014. 1.20 : 용산참사 5주기
2014. 8.18 : 교황 방한, 용산유가족 명동성당 미사 초청
2014. 8.24 : 용산/쌍차 DNA 채취 사건, 현재 기각 결정 규탄.
2015. 1.11 : 용산참사 마지막 구속자 남경남 전철연 전 의장 출소.
2015. 1.20 : 용산참사 6주기

## 용산참사 6주기, 우리의 다짐

용산참사 6년, 살인진압 / 살인개발 책임자를 처벌하자

故 이상림, 故 양희성, 故 한대성, 故 이성수, 故 윤용현 열사여.  
6년이 지나도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기가 죄스럽고 서럽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며, 눈꽃이 날리던 날 355일 만에야 하늘로 보내 드렸는데,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서러운 6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피해자 철거민들의 시간은 2009년 1월 20일 이후 멈춰졌지만, 서럽게도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용산참사 현장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도 해결된 것 없이 그대로지만, 시간의 흐름과 계속되는 참사의 반복 속에서 용산은 이제 잊혀진 과거로 넘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폐허로 방치된 용산참사 현장 공사장 펜스에는, '용산 학살의 진실이 밝혀질 때 이 땅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는 문구가 낙서처럼 쓰여 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용산참사 현장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리 서둘러 폭력적으로 쫓아내려 했는지, 왜 그리 서둘러 대테러 진압 하듯 살인진압을 했는지 죽음의 땅은 묻고 또 묻습니다.

용산참사 6주기는 박근혜 정권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집권 첫 해에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를 한국공항공사라는 공기업의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했습니다. 폭력기구로 전락한 경찰 공권력은, 이제 “여기까지 해도 용납하는 구나!”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내 앞길이 보장되는 구나!”하며, 더욱 자신감을 얻고 활개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본이 연합한 폭력의 구조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한 박근혜 정권은 중복몰이, 공안통치,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며, 민중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추모조차 할 수 없는 2009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학살과 참사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6년의 서러운 시간의 흐름에서도, 여기모인 우리가 ‘용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잊지 않았고,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않기’, ‘기억하기’가 ‘행동하기’ ‘저항하기’를 위한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굳은 다짐을 합니다. 용산참사,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의 그 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용산으로 단죄 받지 않은 국가와 자본의 학살이, 재개발지역과 노동현장, 강정과 밀양 등 마을 공동체들을 제2, 제3의 용산으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학살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학살정권 몰아내고, 국가와 자본의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 잊지 않고, 행동하며, 함께 싸워갈 것입니다.

용산학살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학살 책임자, 공항공사 낙하산 김석기를 처벌하자.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고, 주거생존권 쟁취하자.

여기, 사람이 있다. 국가폭력 끝장내자.

## 2015년 1월 용산학살 6주기를 맞으며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 용산참사 6주기 추모위원회

### 참가단체 (1월15일 오전 현재)

강정마을회, 광주인권영화제,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다산인권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전국세입자협회),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보건의료노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금융연맹,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삶공동체, 섬돌향린교회, 연분홍치마, 예수살기,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조,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좌파노동자회, 주거권기독인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촛불교회, 추모연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평화바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독립영화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진보연대, 향린교회, 홈리스행동 // 용산참사6주기 부산추모위원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http://mbout.jinbo.net>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아랫마을)

전화 02-3147-1444 팩스 02-6008-0273 이메일 [mbout@jinbo.net](mailto:mbout@jinbo.net)

### 추모단체 참여 및 후원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용산참사,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 — 용산참사의 대표적인 진상규명 과제들

2009년 1월 20일, 서울의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서는 망루 농성을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동원되어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화재로 5명의 농성 중이던 철거민과 1명이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했다.

이 대참사에 대해 검찰은 철거민들만 기소했고, 그들은 4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1명의 경찰 특공대원이 사망한 범죄에 대한 죄를 사법부는 철저하게 물었다. 반면에 철거민 5명이 사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하여 검찰은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0년 11월 11일, 기소된 철거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 1년 10개월 만에 종결된 사법부의 확정 판결로 용산참사의 진실은 모두 밝혀졌을까? 우리는 용산참사 6년이 흐른 오늘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왜일까?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정권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 만일까?

안전대책 마련도 없이 서둘러 진압을 하다가 6명이 사망한 참사의 현장은 6년이 흐른 지금도 공사는 중단된 채 폐허로 남아 있다. 진압이 아닌 협상을 통한 사건의 해결이었다면 사람이 죽는 대참사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용산참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학살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범죄는 규명되지 않았다.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을 통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자본과 이를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뒷받침한 국가가 결탁하여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만 국가법 질서를 위반했다며 단죄 당해야 했다.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한다. 국가는 세입자인 철거민들을 국민으로 대우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는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 6주기를 맞아 지금도 용산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며,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현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경찰 책임자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사람의 목숨을 담보한 생존권 유린의 참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여기 사람이 있다”는 용산참사 진상규명 투쟁의 구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모든 사람은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국가의 정책과 시행 모두에서 그 책임소재도 밝히고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용산참사 6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과제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일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수많은 의혹들-진상규명 과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8가지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진행해갈 것이다. 이후 결정적인 단서들을 확보하여 재심 과정을 거치거나 기타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힐 것을 다짐한다.

## 밝혀야할 의혹 \_ 글 쓰는 순서

1. 어떻게 용산 4구역 개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을까?
2. 용산참사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3. “김석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현장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4. 망루 진압 채증영상은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5.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었을까?
6. 망루를 탈출한 고 이성수, 고 윤용현은 왜 망루 안 사체로 발견되었을까?
7.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이례적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부검 이유는 무엇인가?
8. 안전계획은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나?

<작성자 :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박 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랑 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

김일란 연분홍치마 활동가, 다큐멘터리 감독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1

## 어떻게 용산 4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을까? 용산4구역재개발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2009년 1월 20일 벌어진 용산참사는 도시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에 정부가 진압경찰을 투입하면서 여섯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은 이윤을 중시하며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잘못된 개발정책에 있다며, 여야를 떠나 재발대책마련을 이야기했다.

용산참사는 이러한 기존의 개발관행에 더해, 당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설자본의 이윤보장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뉴타운 등 대규모의 도심광역개발 사업을, 상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견된 참사라고도 할 수 있다. 2010년 12월, 남일당 건물이 철거되며 용산4구역의 모든 건물이 철거되었다.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 용산4구역은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다. 사법당국은 용산참사의 무리한 진압책임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던 것처럼, 잘못된 개발로 사람이 죽고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용산4구역의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용산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원인인 용산4구역 개발의 문제를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① 구청의 빠른 인허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도심을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며, 심지어 5~6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용산4구역은 2006년 4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철거직전의 마지막 인가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2010년 11월에 법원으로부터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판결을 받았다. 또한 당시 용산구 구청장인 박장규는 2012년 2월, 타 구역 재개발 비리로 구속되었다.

이에 용산4구역의 빠른 인허가 과정에서 조합-시공사-구청/구의회 간의 비리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 ② 시공사 삼성물산은 책임 없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절차상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공사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진행되는 착공부터 사업을 주도한다.

그러나 착공 이전에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재개발조합이 철거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기로 했다. 또한 개발 추진 기간 내내 재개발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삼성물산 직원이 2008년 철거용역 업체인 호람건설로 자리를 옮겼다. 이것만 해

도 폭력적인 철거와 이주를 삼성물산이 관리하고 주도했다는 것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삼성물산은 재개발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4년 전인 2003년에 이미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5992억 원(평당 512만원)짜리 재개발 공사를 따냈다. 당시 삼성물산은 추진위원장이던 김아무개 씨의 계좌로 '입찰 보증금' 10억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전에 이미 사업계약을 맺어놓은 것이다. 이에 삼성의 커넥션 문제와 사업초기부터 용산참사가 있기까지 삼성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해야, 근본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정비업체는 책임이 없나?

조합에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컨설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의 문제도 일부 제기된 바 있다. 용산4구역 정비업체인 (주)파크엔시티 회장은 전직 용산구의원이었다가, 폭력·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으며, 조직폭력배 범서방과 두목인 김태춘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정치권과의 인맥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구청장인 박장규의 선거지원 등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파크엔시티는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2003년부터(2005년에 등록) 주민 동의서를 받는 OS 업무를 진행했으며, 정비용역비 역시 통상 평당 3~5만원인 것에 비해 평당 9만원으로, 총 105억 여 원의 높은 용역비로 계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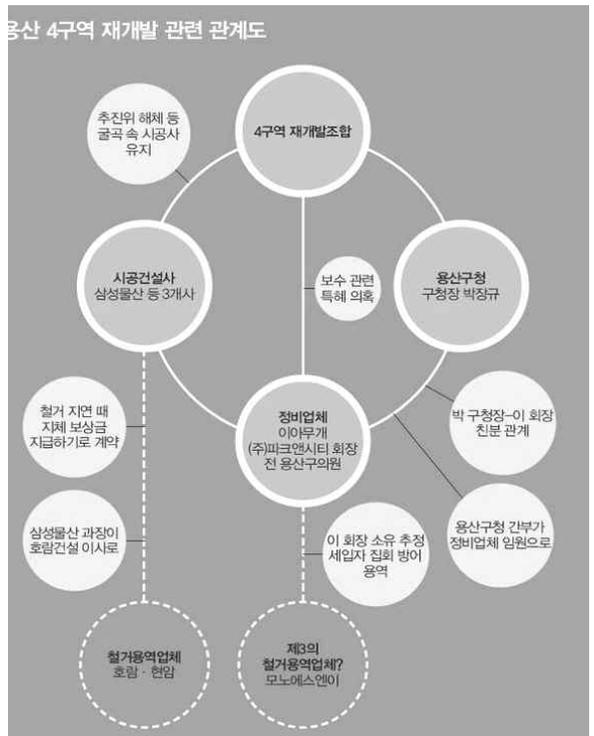
이에 정비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에 비리 여부와 정비업체의 관련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 ④ 철거업체는 책임이 없나?

용산참사가 있기 전, 용산4구역에서의 용역폭력의 심각성은 철거민들의 증언과 사진, 영상 자료 등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철거업체인 현암과 호람이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철거/경비업체임이 드러났다.

용산참사 당시 현장을 누비며 POLICIA라고 적혀있는 사제 방패를 든 이들 역시, 경찰로 오인되었던 철거용역들이었다. 당시 철거민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남일당 건물 3층에서부터 집기들을 불태우며 연기를 위로 올려 보냈던 용역들과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던 용역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sup>1)</sup>

특히 당시 제3의 용역업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합의 대의원회의 용역계약 내용에 등장하는 '모노에스엔이(S&E)'다. 이 업체의 업무 내용은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세입자 집회 방어 용역' 등으로



한겨레21 2009.2.20 제748호

1) 물포 쓴 용역 2명 중 1명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1명은 벌금 150만원 / 불 지른 용역 5명 중 1명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는 벌금 200만원 판결.

적혀 있었다. 호람과 현암건설 말고도 제3의 철거용역업체가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계다가 모노에스엔이는 정비업체인 (주)파크앤시티의 회장의 아들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현암, 호람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철거업체와 경찰의 유착관계는 이미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문제가 된 만큼, 철거업체에 대한 책임규명도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용산4구역 개발, 서울시의 책임은?

용산4구역의 개발은 법적으로는 4구역 조합원들이 주최인 별개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그럼에도 단국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용산 부도심 개발계획과 함께 거론되어 지적되곤 한다.

서울역에서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서울부도심’ 개발 사업은, 사업비만 총 50조에 달하며,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넘어 대권도전 핵심 플랜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되는 거대한 개발프로젝트의 하나로 배치된 개발 사업이란 평가이다. 이중 핵심인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역시, 삼성물산이 대표 컨소시엄을 담당했다. 이러한 거대 개발프로젝트와 연결하여 용산 4구역이 있었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각종 개발 인허가가 났으며, 이른 시기부터 용역깡패들이 상주하면서 세입자들을 궁지로 몰았다 할 수 있다. 때문에 용산참사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2

## 용산참사에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민적 저항(‘광우병’ 파동)에 부딪힌다. 광우병 파동에 항의하는 대규모 저항을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으로 잠재웠다. 나아가 집회시위에 참가한 이들에 대해 채증자료를 통한 추적과 소환, 압수수색, 벌금형 부과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이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전폭 위축시켰다. 그런 이명박 정권은 이후 유난히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른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합법보장·불법필벌’을 강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집권 2년차를 앞둔 이명박 정권은 2009년 1월 18일,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2009년 1월 19일, 전철연 소속의 용산 4구역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한강대로변의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옥상에 망루를 지으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권의 법질서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였다.

청와대로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에 도전하는 전철연의 농성을 좌시할 수 없었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로서도 이를 조기에 진압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망루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기도 전에 이미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조기 강제진압의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농성 철거민들과 대화나 협상은 추진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력을 투입한 강제진압에 들어갔다.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진압은 비극을 불러왔다.

## ① 쌍용차 진압 청와대 직보, 용산참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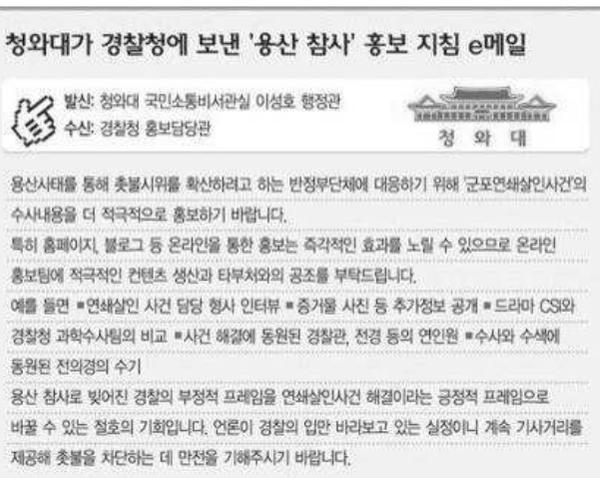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09년 8월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농성 진압과 관련해서 2012년 9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이 강제진압에 반대하자 “대통령께 직보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와 관련한 강제진압은 청와대에 직보해 허락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은 다를까? 서울도 아닌 평택에서 노동자들이 공장 안에서 농성을 하는 것을 진압하는 과정도 청와대에 직보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용산의 망루농성은 서울의 도심 한 복판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였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집권 2년차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그렇지 않고, 경찰 자체 판단으로 이루어진 강제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더욱 신중하게 진압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이전에도 경찰은 철거민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집회시위 진압 매뉴얼>에서 망루 농성을 진압할 때는 ‘인내진압’을 강조했다. 위험요소가 제거된 뒤에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진압하는 매우 신중한 진압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찰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용산 망루농성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달랐다.

최초 화염병 등장 1시간 반 전에 이미 특공대 1개 제대를 현장에 배치하였고, 농성 초기에 이미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진압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농성 철거민들과의 대화는 형식적이었던 것이었을 뿐 조기 진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에 따라서 진압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매우 서둔 듯한 진압의 전 과정, 경찰의 집회시위진압 매뉴얼에도 어긋나는 진압, 진압 과정에서 윗선에서 계속되는 다그침 등이 있었다. 이런 진압 과정이 과연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와 경찰 자체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하지 않았을까? 검찰 수사본부는 청와대의 개입설은 아예 수사대상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 ② 청와대는 왜 군포연쇄살인사건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려 했을까?



**청와대가 경찰청에 보낸 '용산 참사' 홍보 지침 e메일**

발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이성호 행정관  
수신: 경찰청 홍보담당관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은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나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4일,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검거되자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의 보도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곧 청와대의 언론사들에 이메일로 보도 지시를 했음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청와대가 강력히 부정했으나 ‘보도지침’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시인하고,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청와대 행정관을 해임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우병 파동을 막 벗어난 이명박 정권으로서는 용산참사로 인해 국민적 저항이 촛불운동으로 변지는 것을 초기부터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청와대가 보도지침까지 언론사에 보내면서 무리수를 두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용산참사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청와대는 이처럼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용산참사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신종 보도지침 사건은 국회에서 잠깐 따지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이라도 다시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청와대 행정관 외에 책임질 윗선이 없다는 것인가?



### 3

## “김석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총괄하고 있었다”

참사 당시 김석기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사건 당시 서울 경찰청 집무실에 있었으며, 진압 작전 전후 휴대전화를 통해 보고받았을 뿐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보내 무전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해 "무전기는 있었지만 안 켜 놨다"고 답변서를 받았다. 무전기 전원을 켜 놓았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추측할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관련 로그자료 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다"고 발표했다. 참사 초기 김석기 내정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현장의 상황을 지휘했는지는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를 단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보고만 받았지 승인하지 않았다”(김석기 국회 답변)로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010년 2월경 국가인권위는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하고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한다"며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조치는 심히 균형을 잃었으며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의 영역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 중 어떤 누구도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건 초기 무리한 진압으로 참사에 이르게 한 경찰 수뇌부의 책임을 따지지 않은 결과였다. 그래서 김석기 당시 내정자가 참사 당시 상황을 지휘했는지 여부는 아직도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참사의 책임자가 낙하산으로 정부 기관에 버젓이 취임하고, 참사 이후 6년 동안 국가는 단 한명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국가 폭력의 악순환은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① 경찰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 사안에 대해 대법원

등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용산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 원인이었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설득과 대화과정 생략, 경찰특공대 투입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투입으로 극단적 상황을 초래, 화재발생 물질 안전 소진 전 진압, 유류화재에 대한 미대책, 안전매트 등 안전장비 구비 없는 등 진압과정 안전조치 미실행)가 성립한다. 또한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책임이 있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 사망 등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경찰책임자에 대해 무혐의로,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법적 책임을 면책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

## ② 경찰 지휘 책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있다.

당시 김석기는 현장 상황을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다. 우리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또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또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 현장에 없던 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는 판례를 가지고 있다. 이송범 경비과장은 당시 무선 상황을 총괄하는 자로서 진압 작전의 결제선상에 있던 자였다.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 현장지휘자등과 무선을 총괄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③ 김석기는 현장의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추가 수사기록의 지휘부 신문사항과 무전 녹취 비교를 통해 확인된 상황을 보면, 김석기는 당일 상황실 또는 바로 옆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초기 확보된 경찰 무전녹취록의 대화와 현장 지휘부의 무선 내용은 누구의 대화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추가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의 경찰지휘부 신문내용과 무전녹취록 교차 비교로 무전 대화 나눈 이들이 일부 확인된다. 경찰청

상황실 바로 옆방은 김석기의 집무실이었고 상황실 지휘부가 김석기에게 수시보고(구두 대면)하는 내용들도 발견된다. 이는 곧 김석기가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비1 과장이 7시 12분 화재를 진압하고 청장실에 들어가 진압이 순조롭다고 보고를 한 바는 있습니다.”(이송범 진술조서 중)

1월 20일 작전 당시 경찰 지휘부 위치를 보면, 용산 현장에는 김수정 서울청 차장과 이성규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신두호 기동본부장, 박삼복 특공대장, 백동산 용산서장 등이 있었다. 서울청 상황실에는 이송범 서울청 경비부장과 김원준 경비1과장이 경비계 상황실에 위치하면서 상황에

대한 총괄 지휘를 하고 있다. 상황실 옆방은 김석기 집무실이었다.

이송범은 진술조서에서 용산철거민 농성현장에서 작전변경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6시 18분에 경비과장이 용산서 경비과장에게 무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준비된 크레인이 어제 예정했던 것보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작전은 계단을 통해서 먼저 진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3,4층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고 옥상 또는 4층 진입하는 통로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지시했다”고 진술한다. “경비과장 혼자 작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김원준 경비과장 혼자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김원준 경비과장 역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용산경비과장에게 지시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한다.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는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과장이 단독으로 작전 변경을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송범 경비부장은 진술조서에서 “작전 계획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 작전 진행 여부 및 수정 여부는 현장 지휘자 혼자 결정하지 않고, 경찰청 상황실에서 판단을 해준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김원준 경비과장은 진술조서에서 “(진입계획서 작성에는) 홍완선 경정이 기안을 하여, 저에게 결재를 맡고, 그 뒤 홍완선 경정이 이송범 부장, 김수정 차장까지 결재를 받은 다음, 저에게 주면 제가 청장에게 결재를 받습니다. 제가 1월 19일 오후 11시 조금 넘어서 홍완선 계장으로부터 진입계획서를 받아 오후 11시 30분경에 청장에게 대면결재를 받았습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김석기 내정자는 사건 지휘의 책임이 없음을 무전기를 꺼 놓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회피했다. 그러나 그가 당일 충분히 사건 지휘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검찰의 미제출 추가 수사기록 속에 있다. 진압의 지휘 책임자 모두 법적 책임을 면책 받은 지금, 김석기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의미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김석기의 지휘 책임 추론이 가능한 이 상황이 밝혀졌다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다시금 김석기의 위치를 통해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은 참사의 국가 책임을 되짚어 본다.



## 4

### 망루 진압 채증영상은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

망루 진압 과정에 대한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은 용산 망루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채증반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서 진압과정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채증되어 있다. 남일당 건물 진입 과정 전체가 모두 채증되어 법정에 자료로 제출되었다.

그런데 유독 망루 진압과정을 담은 동영상은 제출되지 않았다. 남일당 건물의 계단을 통해서 진입하는 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는 망루 앞에서 꺼져 버렸다. 만약 망루 안의 진압과정을 담은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화재의 원인을 비롯해서 사망자들이 망루 안에서 사망하게 된 경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 ① 경찰특공대가 채증한 영상은 없다?

경찰들의 채증은 철거민의 시위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진압 이후 사법적 처리의 근거

로 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채증은 2009년 1월 19일 오전부터 시작되어 화재에 이르기까지 약 25시간이 넘는 시간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2009년 1월 20일의 경우에는, 중부서, 금천서, 혜화서, 서대문서, 관악서 등의 경찰서에서 차출된 19명의 경찰들은 9조개로 나뉘어, 남일당 건물 진입구, 신용산 빌딩 옥상, 현대자동차 앞 등에서 당시의 상황을 채증하였다. 그러나 애초에 컨테이너에 탑승하여 망루 안으로 진입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찰은 경찰특공대의 반대에 부딪혀 탑승하지 못하였다. 대신 경찰특공대 채증조가 직접 채증을 하겠다며 컨테이너에 탑승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인터넷 방송 칼라TV가 촬영한 영상에도 분명하게 찍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심 재판당시, 변호인단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경찰특공대가 채증한 영상이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 ② 망루 앞에서 멈춰진 영상, 혹시 삭제한 것은 아닐까?

경찰이나 검찰은 주요한 증거인 경찰 특공대 채증영상이 없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출 증거자료에서는 결정적인 장면이 삭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2009년 1월 20일 당시, 컨테이너 진입조와 남일당 건물 진입조로 나뉘어 작전이 이루어졌다. 컨테이너 진입조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남일당 건물 입구를 통해 망루로 진입하는 작전이 먼저 시작되었다. 이때 경찰특공대와 함께 채증조가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것이 칼라TV, 사자후TV 등에 포착되었다.

2009년 용산참사 1심 재판 당시, 경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 제63호가 바로 남일당 건물을 통해서 진입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영상이었다. 그러나 증거 제63호의 경우, 경찰특공대들이 망루 앞까지 진입하기 전까지만 촬영되어 있다. 즉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뚝’

끊겼다가, 망루 건너편 옥상에서 화재를 촬영한 영상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망루 화재를 전후한, 망루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없다.

2009년 용산참사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이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서 경찰 채증영상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경찰 측은 망루 안에서 촬영한 영상이 없거나 혹은 화재 앞뒤가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경찰채증의 목적이 시위대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고, 또한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에 타고 망루로 진입하는 영상이나 혹은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여 망루에 접근하는 영상으로 보아, 망루 안에서 촬영된 채증영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검찰에서 증거로서 제시하지 않은 연유에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결코 경찰에는 유리하지 않은 것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검찰이 망루화재의 원인을 철거민들에게 전가하려 했었던 만큼, 분명히 증거자료로서 제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감춰진 경찰채증 영상과 그 내용이 드러남으로써,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5

###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었을까?

사법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망루 농성 중인 철거민들 중에서 한 명이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졌고, 그 화염병에서 불이 붙어 화재가 나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좁은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망루 안에 진입한 특공대원들은 보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의 진술조서에서 화염병을 봤다고 한 특공대원들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어느 누구도 그 좁은 망루 안에서 불붙은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농성 중인 철거민들의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추정하여 판단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화재의 원인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을 갖고 있다. 농성 중인 철거민들의 경우 유증기로 가득 찬 망루 안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진다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었다. 그들이 스스로 자폭을 각오하고 화염병을 던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유증기가 가득 찬 망루 안에서는 자그마한 불꽃 하나로도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모두 무시된 채 1심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보인다”는 화법을 동원하여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 ① 화염병은 던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게 가능한가?

김형태 변호사가 말하고 있듯이 망루는 운동장이 아니다. 너무도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졌다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화염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렇지만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경찰특공대원들은 한결같이 화염병을 보지 못했으며, 1명을 제외한 모든 특공대원들이 한 번의 퍽 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특공대원들은 동료가 사망한 것에 분개하여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졌을 거라고 진술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진술을 법정에서 모두 바꾸었다.

또 망루 농성 중이었던 철거민들이 2차 화재 직전의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진다는 것은 자폭 테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독한 유증기가 짙은 곳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숨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진압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는 어떤 진술도 증거도 정황도 없는 데도 법원은 화염병을 화재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말았다.

## ② 발전기 스위치는 왜 망가졌을까?

유증기가 가득 찬 망루 안에서는 자그마한 불꽃으로도 화재가 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발전기였다. 만약 유증기가 가득 찬 망루 안에서 발전기가 돌고 있었다면 발전기가 돌면서 일으키는 스파크는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건의 현장에서 수거해간 발전기의 스위치(온-오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스위치)는 분실되었다. 스위치가 없는 발전기의 존재는 무엇일까? 농성으로 구속되었던 김창수는 분명히 발전기를 설치하였고, 전깃불이 망루 안에서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언제까지 전깃불이 켜져 있다가 꺼졌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군가 고의로 발전기의 스위치를 발전기 본체에서 떼어냈거나 파괴한 것은 아닌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들은 이런 식으로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런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 망루를 탈출한 故 이성수, 故 윤용현은 왜 망루 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을까?

사망한 5인의 망루 농성 철거민들 중 고 윤용현씨와 고 이성수씨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탈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이들이 연행되거나 구조되지 않고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비판이 있자 오히려 고도로 훈련된 이들이 진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경찰의 주장과 달리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훈련된 경찰특공대도 사망했다. 고 김남훈 경사는 왜 불이 난 망루를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을까. 경찰특공대조차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까. 동료가 채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한 확인이나 조치를 취했는가.<sup>2)</sup> 경찰이 전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확인도 되지 않는 상

2) 당시 경찰지휘무전에 의하면 7시 25분에 망루 안 농성자들이 다 나왔는지 묻자, 확인은 안 되지만 비오경력(특공대)이 나온거 보니 나온거 같다는 대답을 한다.

황이라면 농성자들의 안전도 돌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할 수 있다.

과연 이들이 경찰의 주장대로 극렬한 저항과 시위를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 아니면 미처 화마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인가? 당시 진압과정을 밝히는 것이 6명의 사망자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

7:18 경찰특공대 2차 망루 진입

7:21 화재발생

7:23~7:26 MBC 촬영영상으로 지석준, 이성수 생존확인

7:25 망루 전체로 화재 확산, 망루가 쓰러짐

8:00 작전종료

8:40 수사부장, 형사과장, 현장 화재감식팀 출동

9:38 망루내부에서 시신 4구 발견 및 현장 채증 실시(양희성, 한대성, 이상림, 윤용현)

10:37 현장바닥에서 특공대 헬멧 1점 발견

11:28 5번째 시신 추가 발견(이성수)

12:50 6번째 시신 추가 발견(김남훈)

15:50~18:00 국과수에서 사체 6구에 대한 부검 실시

17:44 사망자 2인(이상림, 양희성) 지문으로 신원확인

### ① 불타는 망루에서 탈출했던 이성수, 윤용현은 왜 주검으로 발견되었나?

1차 화재를 피해 망루 밖으로 나왔던 경찰특공대는 명령에 의해 7시 18분경 망루 안으로 다시 진입했다. 곧 이어 7시 20분경 2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7시 25분경 불길은 망루 전체를 뒤덮었다. 그 과정에서 망루 안에 있던 농성 철거민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망루의 창을 통해 뛰어 내렸다. 윤용현, 지석준, 이성수 등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그러나, 윤용현, 이성수 씨는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루 농성 생존자인 지석준 씨는 윤용현, 이성수와 함께 망루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석준 씨는 윤용현, 지석준, 이성수 순으로 망루에서 뛰어내렸고 이성수 씨가 지석준 씨의 다리 위로 떨어져 자신이 골절상으로 입은 반면 윤용현 씨와 이성수 씨는 뛰어내린 후에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윤용현 씨는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쓰러져 있는 자신을 흔들었으며, 이성수 씨는 불타는 망루에서 멀어지도록 자신을 부축했다고 했다.

“망루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향해 윤용현 씨가 ‘성우야(지석준의 아들 이름) 정신 차려, 여기 있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용현 씨는 남일당 빌딩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용현, 이성수 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골절상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석준 씨의 진술)

지석준 씨의 일관된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과도 일치했다. 동일 시간에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망루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망루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 고 윤용현, 이성수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유가족과 지석준 씨는 MBC 촬영 영상 원본을 확인한 결과 지석준 씨와 옥상 난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고 이성수 씨임을 확인했다.

불타는 망루를 피해 탈출한 생존자, 윤용현, 이성수 씨는 왜 망루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그들이 망루로 다시 되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당시 MBC 촬영영상에 의하면 7시 23분~7시 26분 사이에 고 이성수 씨는 지석준 씨와 옥상 난간에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된다. 7시 25분경 망루는 주차장 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망루 안으로 이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가? 만약 이들이 다른 농성자들의安危가 걱정되어 망루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면, 망루 전체가 화재로 번지기 이전에 옥상은 경찰들이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었는데, 옥상에 있던 경찰들은 그들을 왜 막지 않고 다시 망루로 들어가게 두었을까?



## ② 경찰특공대 김남훈 경사는 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나?

경찰특공대원들은 망루에서 2차 화재가 나기 직전에 모두 철수했지만 김남훈 경사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화재발생 이후 무전내용 상으로도 제대원에 대한 정확한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았다. 김남훈 경사의 사망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친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에게도 12시경 실종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남훈 경사가 어떤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당시 진압상황에 대한 증언으로 죽음을 피하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김남훈 경사가 속한 경찰특공대 1제대는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진입해 농성자들을 검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특공대원들은 2차 망루 진입 당시, 많은 특공대원이 진압의 위험성과 구토, 심지어는 환각 증세까지 느낄 정도로 유증기가 짙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특공대원들에게 기소된 철거민 변호인들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무전으로 보고할 생각은 안했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특공대는 최대한 빠른 진압이 목적이라 그런 생각은 안했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농성자들을 해산시키기보다는 신속한 진압이 더 우선이었다는 것이다.

**1제대 소속 A 대원:** 1차 진입 때는 시너 냄새가 별로 안 났으나 2차 진입 땀 환각상태였다. 정신이 취한 것처럼 혼미해져서 계단을 잡고 올라갔다. 불 회오리가 저한테 덮치는데도 시너에 중독돼서 정신이 없었다. 밀폐된 공간에 시너가 그렇게 될지 몰랐다. 마약을 하면 그런 느낌이 나겠다고 느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깨보니 살아 있었다.(이 대원은 좁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1제대 소속 B 대원:** 2차 진입 때 시너냄새가 출입문과 계단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많이 났다. 약간 몽롱해지는 느낌이 났고 인화성이라 느꼈다. 이상하다 1차와 다르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위험을 느꼈지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 상황에서 퇴각하자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시 진입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증언들이다. 특공대와 지휘본부의 무전망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입상황과 망루 내부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지휘부는 신속검거만을 중용했다. 특히 2차 진입에는 소화장비도 거의 없었다. 1차 진입이 끝나고 재진입을 준비하는 동안 8~10여 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소방대책은 특별히 세우지 않았다. 1제대 한 대원은 “망루 모서리의 함석을 뜯다가 2차 진입을 하라고 해서 소화기도 다 떨어지고 소방호스 지원도 없이 방패만 들고 올라갔다”고 말했다. 전 김수정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경찰 지휘부는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으로 기동대보다는 특공대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특공대원들과 경찰 지휘부의 진술은 모두 조급함으로 안전을 외면한 실패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 실패한 작전의 대가는 참혹했다.

### ③ 사망자 시신 발견 위치는 정확한 것일까?

검찰은 용산참사의 사망자들이 모두 망루 안에서 화재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망루는 화재 중에 동쪽으로 기울면서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전소했다. 망루의 층을 구분하던 바닥은 모두 무너진 상태여서 사망자의 위치는 검찰의 추정일 뿐이다. 양희성, 한대성, 이상림, 윤용현 씨는 망루 4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고, 이성수 씨는 2층 찌그러진 함석 외벽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김남훈 경사는 1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신의 수습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부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한 속에서 경찰만이 현장을 수습했다. 망루를 탈출했던 고 윤용현, 고 이성수 씨의 시신 발견 위치는 망루 안이라는 점은 여전히 의혹임은 앞서 지적했다.



7

###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진행한 부검의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망루에서 시신을 수습한 뒤에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을 이송했다. 참사가 발생한 1월 20일 저녁 9시경 시신을 찾아 헤매던 유가족들은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후 순천향 병원에 안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때까지 유가족들은 남편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고 당일 성급하게 사망자들의 부검을 실시하도록 지휘했던 것이다. 화재 사건의 부검은 화재 사건의 정황과 남은 증거를 맞추어 보고 진행되는 것인데 당시는 사고 정황에 대한 아무런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체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부검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④항에도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시신 부검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부검을 시행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서 부검을 시행하는 과정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부검 감정서를 보면 사건 당일 5구의 시신에 대해 5인의 부검의가 거의 동시에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건 이후 시신을 수습하고 하루 정도가 경과한 이후 부검은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이 ‘작전을 치루듯이’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사가 부검지휘할 때는 관행적으로 “사체 부검하여 사인 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라고 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부검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사체가 인도되고 있다. 그런데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부검이 끝난 후에도 장례를 지낼 때까지 한참동안 유족들에게 사체가 인도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검찰 지휘가 없기 때문에 사체를 유족들에게 보여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왜 비윤리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부검을 빨리 해치우려 했는가.

### ① 유족 동의도 없이 그토록 빠른 시간동안 부검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왜 시신 수습 후 바로 부검 했는가 밝혀야 한다. 유족 동의조차 없이 이례적으로 부검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시신 5구에 대해 각기 다른 부검의가 동시에 부검할 만큼 긴급을 다룰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유족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시행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긴급한 부검 관련 주장중 하나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바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사망자들의 신원은 유품들로 확인 가능했다. 특히 고 이상림 씨의 경우 용산구청으로부터

온 민원회신 서류를 품에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검찰은 체포자들의 체포시한이 48시간이어서 급박하게 부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조호경 검사,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 김중용 변호사에게 말함). 그러나 체포시한과 유족 동의 없는 부검의 법적 연관 관계는 없다. 심지어 참사 발생이후 21일이 지나서야 검찰은 사건 결과를 발표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참사였다. 그런데 검찰은 유족들의 승낙이나 통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검을 실시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② 부검이후에도 유족에게 사체인도는 이뤄지지 않고 미뤄졌다.

유족들은 부검이후에야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지체 없이 사체

인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은 검찰 지휘가 없었기 때문에 유족에게 인도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와 근거를 밝혀야 하며, 유족들에게 예를 다하지 못한 사죄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또한 부검결과는 2월 2일에야 유족에게 통지되었다. 부검과 관련된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진 것은 부검결과서밖에 없다. 그와 관련한 유족들에 대한 사죄조치 이뤄지지 않았다. 희생자들에 대한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법적 절차조치 이뤄지지 않은 지금, 이례적이고 신속한 부검은 여전히 의문일 수밖에 없다.



## 8

### 왜 진압작전은 안전을 무시한 채 단행되었는가?

경찰은 전철연 회원들의 망루 농성을 진압하는 일이 매우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대책을 진압작전 계획 속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나 현장에 투입되는 특공대원들은 망루 안에 어떤 위험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접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실제 화재도 발생하는 등으로 진압작전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작전을 변경하거나 중단하지 않았다.

#### ① 안전계획은 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나?



서울지방경찰청 1.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압계획에 따르면, “사전 조치로서 소방차 최대한 확보, 안전사고 대비 구급차 등 의료장비 대기, 동원경력에 대한 안전진압 등 교양철저,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작전시 유의사항으로서 작전 개시전 안전매트·소방장비 등 장비확보, 안전대책 강구” 등을 언급하

고 있으나, 실제 진압과정은 안전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소방방재청의 국회보고에는 이 사건 이전에 출동한 소방차는 2대 뿐”이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제로 소방차가 얼마나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고, 이송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현장은 확인 못했으나, 용산서장이 모두 준비되었다고 하므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았다”고 대답하는 등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당시 경찰청 지침(2001)에 의한 농성자의 위치, 저항 수위 파악, 대비책 강구/ 시설여건 및 위험요소 파악, 제거 및 안전조치/ 특수장비 및 안전장구 준비 및 설치 등 최소한의 사전조치도 준수하지 않고 성급하게 진압을 개시하게 된 경위와 책임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 ② 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 진압을 왜 중단하지 않았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진압계획에 의하면 위험물 현황으로 신나(20L) 60여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LPG 가스통 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정작 진압에 투입된 특공대원들에게는 위험물의 종류나 수량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을 왜 중단하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에 이송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도 시켰을 것인데, 특공대원들이 어떻게든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공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당시 현장 총책임자였던 김수 차장은 “순조롭게 작전이 진행된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특별한 보고가 없길래 그냥 잘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장 지휘부가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경위 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진압을 중단하지 않은 경위와 책임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